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Online Series

2016. 05.18. | CO 16-15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분석(4): 국제관계와 안보

정성윤(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북한은 '동방의 핵대국'이 되고자 하는가? 지난 9일 폐회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가 염원하는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정은 정권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핵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따라서 핵 포기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이번 당 대회의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와 결의서에서 제시된 김정은 정권의 국제관계와 안보부문의 주요 내용과 평가 그리고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퇴행적인 반제·반미 대외인식 노출

김정은 정권의 대외정세관은 100년 전 제국주의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 북한은 현재 국제질서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의 침략과 간섭책동으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이 유린당하는' 지배와 예속의 구조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제국주의 반동세력의 강권과 전횡, 침략과 주권침해 행위를 짓부시고 자주권을 수호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이를 '세계자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 아울러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반제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자주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세계평화와 안전의 교란자, 파괴자이자 세계자주화위업의 주타격대상' 이라 지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현재 대북 국제제재 국면을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

에서 미국의 침략과 전쟁 책동의 합리화, 합법화하는 결의 아닌 결의들이 정의와 진리가 짓밟히는 비정상적인 현상'이며 미국이 주도하는 '부정의'(不正義)로 규정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침략적인 뻘럭유지 강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국제적 수준에서 '뻘럭불가담 운동의 강화를 통해 정의로운 국제질서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핵 보유국 지위에 맞는 대외관계 발전' 주장

이러한 김정은 정권의 퇴행적 대외관은 국가의 생존전략과도 직결된다. 북한은 반제국주의적 주권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핵보유국 지위에 맞는 대외관계 발전을 주장한다. 그리고 세계자주화의 위업을 주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보유국 지위를 넘어서 '핵무력'(핵능력)의 질량적 강화를 통해 '동방의 핵대국'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의 항구적 전략으로 경제·핵 병진 노선을 지속할 것"이며, 국방기술적 차원에서 "핵무기 소형화, 다종화 실현 및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에 대한 강한 집착은 "핵 선제불사용(No First Use)·핵전파방지 의무(비확산 의무) 이행·세계 비핵화 실현에 노력할 것" 등 3가지 핵 국가 운영원칙에도 담겨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독트린은 김정은 정권이 '책임 있는 핵 보유국 지위' 고수를 전제로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은 핵지위 강화와 핵능력 향상 이외에 국방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 강화를 통한 재래식 국방능력의 향상 또한 적극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의 '정밀화·경량화·무인화·지능화를 통한 주체무기 발전'에도 국방자원을 적극 분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정권이 대북제재에 대한 강력한 불복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제재국면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북한은 제재에 대한 굴복을 국가 자주권의 훼손과 생존에 대한 중대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고,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해 장황하고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향후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정치외교적 강압에 대한 강력한 저항도 암시했다. 이는 향후 정세가 비핵화를 위한 타협모드 보다는 북한의 불복과 추가제재로 인한 대결국면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제재국면의 지속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북한이 비핵화 대신 핵보유 및 핵능력 지속 강화를 강력히 피력했기 때문이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와 각국의 독자적 제재안들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거나 강대국들의 전략적 타협이나 용인이 없다면 자동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아울러 사실상 제재

주도국인 한미와 이에 저항하고 있는 북한이 상대측에 대한 기존 요구를 철회하거나 혹은 상대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도 제재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주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중국의 중재안인 소위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론'에 대해 지난 4월 12일 외무성 담화에 이어 이번에도 묵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당분간 제재 출구 환경 조성이 힘들어진 점도 부가적 이유이다. 하지만 이번 당대회에서 북한이 주변국들의 긍정적 역할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 비난을 자제했기 때문에, 향후 중러의 입장과 노력에 따라 제재국면의 현상변경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

'핵 강압외교'와 '핵 평화공세'의 전략적 병행

북한이 극단적인 핵 외교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는 '핵 강압외교'와 핵 지위국 보유를 전제로 하는 '핵 평화공세'를 적극적으로 병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핵보유국 지위에 걸맞은 대외 관계 재구축"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고자 할 것이다. 우선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위협하는 비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경우 핵능력의 적극적 과시를 통해 전략적 가치를 제고시키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완전하고도 정치적인' 핵불사용 원칙을 천명했다. 이는 '핵공격'을 받지 않는 한 핵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전통적 '선제불사용' 개념과 다르다. 따라서 제재국면이 지속되고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이를 자위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주장하며 언제든 핵선제사용을 비롯한 공세적 핵전략으로 전환할 것이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영속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이 도래할 경우를 대비해 핵 평화공세 또한 적극 병행할 것이다. 북한은 책임 있는 핵지위국 입장에서 비확산의무 및 비핵화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향후 설사 제재 출구국면이 조성되고 미국과의 불가침협정 및 평화협정 논의가 전개되더라도, 과거핵 중심의 핵군축이 아니라 미래의 핵만을 논의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향후 평화협정·평화체제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경하게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이해와 입장과 지속적으로 충돌할 것이다. 특히 '완전한 한반도비핵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중국에게도 향후 저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북핵 문제에 있어 중재국의 부재라는 전략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북핵 도발의 빈도가 높아질 것이다. 김정은은 통치기간 동안 핵보유국 지위 헌법 명기(2012년) 및 노동당 규약 명기(2016년)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국내 제도적 명문화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또한 지난 5개월 동안 4차 핵실험 직접 지시 공개·핵, 미사일 실험 및 시설 참관·당 대회에서 핵보유의지 직접 천명 등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핵 시위 행보를 보였다. 이는 '공화국의 핵은 내가 직접 통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천명한 것이며, 김정일 정권 시대의 '핵 모호성 전략'을 폐기한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젊은 김정은의 즉흥적·도발적 정책결정 성향과 정권기반 확보 및 대내결속을 위한 과시적 행보를 고려해 볼 때 핵도발의 위험성이 한층 증가할 것이다. 향후 강력한 제재가 지속되어 북한의 경제부문 피해가 누적될 경우 경제·핵 병진노선의 한축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 경우 김정은 정권은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아닌 핵 능력의 잦은 시위 및 도발을 통해 경제부문의 결손을 상쇄하려 할 것이다. 즉 대북제재→북한의 경제타격→북한의 핵능력 시위 필요성 증가→핵도발 강행→제재 강화와 같은 악순환이 조성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한국 및 국제사회에 제재 무용론이 촉발될 수도 있다.

대공방어체계 현대화·요새화 시사

한국의 공세적 군사압박에 대한 안보 불안감을 노출하였다. 북한은 당대회에서 "반항공경보체계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각종 대공화력 수단들로 전국을 그물처럼 뒤덮게해 조국의 영공을 요새화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대공방어체계 구축에 국방자원을 투자할 것을 암시했다. 이는 한국의 차세대 공군력 우위 및 킬체인 능력 보유 추진·미국의 전략자산 동원 시위·한미연합전력의 작계5015 채택 등에 대한 북한의 안보불안감 증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첨단 레이더 시설 확보·지대공 미사일 능력 확충·차세대 공군기 보유 등 통상 대공방어력 구축에는 엄청난 재원과 기간이 필요하므로, 북한의 동원 가능 군비 수준과 첨단기술 및 무기 도입이 어려운 제재환경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 달성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오히려 방호진지 구축작업 등에 군인 및 주민들의 노동력이 과도하게 동원되면서 내부 불만이 증폭될 수도 있다. 북한이 금번 당대회에서 남북한 간 군사회담을 제의한 이면에는 이러한 군사적 위협을 감안한 점도 배제할 수 없다. ⓒKINU 2016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